

# ISSUE & FOCUS

Newsletter 2018-4

## 남북 · 미북정상회담의 의제는 ‘북핵 폐기’ 여야 한다.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 요 약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를 계기로 ‘국제공조의 제재와 압박’이 ‘민족공조의 대화와 협력’의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 문제는 김정은의 ‘핵 있는 상태에서의 대화’가 북핵폐기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특히 문재인대통령 특사단이 말한 ‘비핵화의 의미와 김정은이 말한 선대(先代) 유훈’이 오히려 ‘북핵 폐기’에 대한 의구심을 증대시켰다. 왜냐하면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입장차이 때문이다. 즉 한미 당국의 비핵화는 ‘북핵 폐기’이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자위(自衛)를 전제로 한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이다. 비핵지대화는 핵전략자산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거나 최소한 ‘국제적 핵감축’의 틀 속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개념의 차이로 지난 25년 동안 한반도 비핵화는 진척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 핵폭주와 진화를 측면 지원한 결과를 초래했다. 비핵화가 선대유훈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용어전술에 불과할 뿐이며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 역사를 보면 ‘국가 핵무력 완성’이 선대의 유훈임을 직시해야 한다. 북

한의 NPT 탈퇴 이후 북핵폐기를 위해 5차례의 합의가 있었지만 모두 허사로 끝난 이유는 꼬리표가 달린 비핵화였기 때문이다. 즉 단계적 합의는 북한이 핵진화를 위한 시간벌기에 악용되었고 제대로 검증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당연히 ‘북핵 폐기’에 집중하고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즉 선(先) 북핵 폐기 후(後)관계정상화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북한의 핵 진화를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북한이 핵을 앞세워 한국을 ‘적화흡수통일’하는 길을 열어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 1. 들어가며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매개로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북한 선수단의 올림픽 참석과 남북 단일팀 구성, 김정은 특사로 김여정의 개막식 참석, 국민정서를 무시한 천안함 폭침 주범(主犯)의 폐막식 참석으로 이어졌다. 올림픽 기간 동안 일련의 이벤트들은 ‘국제공조의 제재와 압박’을 ‘민족공조의 대화와 협력’의 모드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획물들이었다. 이 전환 모드는 3월 문재인대통령 특사단의 방북(3.5-6)으로 이어졌고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특사단이 방미(3.11-12) 후 트럼프 미대통령으로부터 5월 미북정상회담까지 약속받았다. 남북-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김정은은 돌연 중국을 비공식 방문(3.25-28)해 북중 간 대화와 협력의 공간 조성을 탐색했다. 한반도의 2018년은 새해 벽두부터 ‘어떻게 북핵을 폐기해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기반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재판 짜기의 과정이 지속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유발된 남북관계 민족공조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 문 대통령 특사단이 방북했다. 방북 특사단은 3월 6일 귀국 후 6개 항의 ‘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언론보도문’의 메시지는 ‘4월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북한의 비핵화 의지’, ‘미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남북정상회담과 미북관계 정상화는 ‘북핵 폐기’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도문의 핵심은 비핵화와 관련된 3항이다. 3항은 ‘셋째,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특사단은 ‘한반도의 비핵화는 선대(先代)의 유훈(遺訓)’이라는 말도 부연하면서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김정은은 방중 후 중국의 신화통신은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사단의 언론보도문과 중국 언론보도에는 ‘비핵화에 꼬리표가 달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 2. 동상이몽(同床異夢)의 ‘한반도 비핵화’

‘비핵화’(Denuclearization)에 대해 이해 당사국은 동상이몽의 형국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국제사회)이 규정한 의미와 북한과 중국이 규정한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 등 국제사회의 ‘비핵화’의 개념은 한국이 비핵(非核)국가라는 엄연한 사실을 전제로 “북한의 보유 핵물질과 핵관련 시설 및 핵무기 개발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해체(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하여 북한의 핵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의 과거-현재-미래의 핵 물질(핵탄두와 미사일)과 시설 및 계획을 완전하게 폐기하는 것이며, 북핵폐기로 한반도비핵화의 당초 목표가 완수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비핵화’는 수사(修辭)적 용어일 뿐이고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를 의미한다. ‘비핵지대화’의 개념은 비핵(非核)약소국이 기존 핵강국의 핵위협과 핵전쟁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에서 출발했다. 김일성은 1986년 12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8기 1차 회의에서 “조선(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당시 한국에 배치되어 있던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서 우선 철수시키기 위한 용어전술의 일환이었다. 물론 북한은 핵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김일성은 ‘비핵지대화’의 개념을 차용해 “북핵은 자위용(自衛用)이다. 따라서 자위용인 북핵 폐기보다 먼저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핵전략자산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국제적 핵감축’의 틀 속에서 핵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틀 속에서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임해왔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는 25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의 궤적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김일성의 용어전술은 1992년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으로 한국의 핵개발 의지를 꺾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시키는 일등공신이 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북한이 명시적으로 ‘한반도비핵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조선)반도비핵지대화’라는 개념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개념에 따라 그동안 북한은 비핵화의 길이 아니라 국가 핵무력의 길을 선택해 핵의 진화를 거듭해 왔다는 사실이다. 또한 북한은 주변 상황변화에 따라 핵폐기의 전제조건을 변경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 침략전쟁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 “우리는 핵군축협상에 나갈 용기가 있으며 --”, “북미평화협정이 체결한다면 --” 등을 제시하면서 ‘국가 핵무력의 길’로 질주했다. 이처럼 북핵 폐기에 달린 꼬리표는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이며,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고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선대의 유언은 ‘국가 핵무력 완성’

김일성은 6.25 전쟁 직후 “우리가 핵무기가 있었으면 전쟁에 승리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한 뒤 1960년대부터 핵·미사일개발에 착수했다. 김일성의 핵에 대한 집착이 김정일-김정은의 3대 세습으로 이어지면서 핵미사일 질주는 계속되었다. 특히 김정은이 집권한 6년 동안 4차례의 핵실험과 86차례의 미사일 실험이 있었다. 이는 김일성-김정일의 집권 기간 동안 2차례의 핵실험과 31차례의 미사일실험과 비교하면 제동장치가 풀린 폭주였다. 이런 폭주의 결과물이 바로 지난해 11월 29일 선언한 ‘국가 핵무력 완성’이다.

한편 1993년 북한은 국제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서 탈퇴하면서 조성된 위기를 1994년 제네바 합의로 봉합했다. 이후 김정일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이 핵을 만든 이유”라는 자위적 논리를 펴면서 “조선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언”이라고 거짓말을 계속해왔다. 이후 선대의 유언은 협상테이블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면서 선물을 챙기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역사는 대를 이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비핵화’가 선대의 유언이라는 것은 북한이 상대방을 기만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전술의 일환이며, 오히려 국가 핵무력 완성이 선대의 유언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 4. 일괄타결 vs 단계적 타결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조성된 1차 북핵 위기 이후 국제사회는 북핵 폐기를 위해 5차례나 합의하였지만 모두 허사였다. 이를 보면 북한이 핵개발 포기를 약속한 ‘제네바 합의’(1994),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선언’(2005),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영변 핵시설의 폐쇄·봉인을 합의한 ‘2·13합의’(2007),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에 합의한 ‘10·3합의’(2007), 영변 우라늄 농축활동 중지와 관련시설의 불능화에 합의한 ‘2·29합의’(2012) 등이다. 지난 5차례 합의의 공통점은 단계적 동시적 접근이었고 검증과정은 전혀 진척이 없었다. 따라서 단계적 타결은 북한의 행태를 감안할 때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지난 핵협상 과정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꼬리표가 달린 비핵화는 “늑장 포도주를 새 병에 담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 단계적 타결과정은 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그 함정은 ‘도발중지 → 핵시설 검증 → 핵시설 폐기 → 핵물질(핵탄두) 폐기’의 과정에서 북한이 검증과정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킴으로써 북한이 핵무장력을 강화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핵물질(핵탄두)과 제조시설을 은폐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북핵 폐기를 위해 25년 동안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다종화의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현재는 20-4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꿈을 겨냥한 운반수단은 이미 완성되었고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도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여기서 대한민국을 향한 북한의 핵무력은 이미 완성되어 ‘적화흡수통일’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단계적 접근 방식은 북핵의 무장력을 더 확장시켜 ‘적화흡수통일’의 시계를 앞당길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경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북핵 폐기’는 일괄타결 방식밖에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나 김정은의 방중(3.26-29) 이후 우리 정부는 북핵 폐기를 일괄타결에서 단계적 타결로 전환하려고 한다. 즉 북핵 폐기와 북한의 체제보장을 일괄타결하는 단칼에 해결하는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을 천명하더니 김정은의 방중 이후 단계적 조치에 호응하는 것 같은 반응도 보이고 있다. 참으로 잘못된 방향선회이다. 미국은 리비아식의 일괄타결의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북중이 선호하는 단계적 타결 방식에 편승하면 북핵 폐기는 도로아미타불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스스로 북핵 위협을 방지함으로써 북한에 ‘적화흡수통일’되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방향전환이다.

## 5. 나가며

지난달 2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29일 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 15호 발사 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시점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인데도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당연히 ‘북핵 폐기’여야 한다. 북핵 폐기 이외의 다른 의제는 국가존망의 의제가 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경제지원과 협력의 문제는 차후의 정상회담으로 미루는 것이 요구된다. 사실 김정은의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의 제안, 김정은의 방중의 속내는 김정은의 다급한 사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핵 폐기의 유용한 수단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대북제재의 구조적 허점을 찾기 위해 모든 궁리를 강구하고 있다. 이번 방중도 이런 방안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북한의 단계적 조치에 호응하거나 호응하는 듯 한 신호를 보이면 중국은 이를 적극 활용해 북한을 암묵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결코 중국은 북한은 조중우호협력관계를 훼손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북핵 폐기는 공수표가 되고 우리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운명’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는 당연히 ‘북핵 폐기’여야 하며 그 방식은 일괄타결 방식이어야 한다. 즉 선(先)북핵 폐기 후(後)관계정상화여야 성공한 정상회담이라는 것이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